

동네복지 발전정책 방향 머리맞대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토론회 개최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역할 재정립 등 논의

전주시가 마을 주민들이 이웃을 보살피는 주민 주도의 복지체계인 동네 복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이상록 전북대 교수)는 6일 전북대 인문사회관에 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희망보드미, 동 협의체,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단체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정부 지역복지 발전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인 이상록 교수를 좌장으로 지역복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1주제인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와 중앙-지방 정부간 역할,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서는 김승연 서울연구원 박사가 맡았으며, 이종섭 전북연구원 박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최낙관 예원대 교수가 참여하는 지정토론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복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재정이 부각되는데 단순히 복지재정으로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방분권화가 다양하게 요구되는 복지수요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국고보조의 축소,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역별 재정 편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어, 홍선미 한신대 교수가 2주제인 '지자체의 복지환경 변화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및 과제'를 발제하고, 이지수 군산대 교수와 허승복 전주시의원,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채수훈 팀장(익산시 공무원)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패널들은 "내·외부적으로 변

화하는 복지환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및 과제를 재정립하고, 복지실행자의 위치를 관에서 민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의 경우 올해 발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구성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상록 위원장은 "전주시 각 동에서 협의체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동네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활동가를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동 복지 차원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

전주시, 주민 소통공간 조성

교류·공유경제 확산 기대

전주시가 원도심에서 추진되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소통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전주시는 전주 원도심에 대한 각종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 문을 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완산구 풍남문2길 137) 공간을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재조성, 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국가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

해당사자간 협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이다.

시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주민 설명회 및 회의가 없는 날에는 센터 1층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추가예산 없이 보다 많은 전주시민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공간으로 재조성하기로 했다.

공유공간은 공유부위(카페)로 조성될 예정이며, 시는 전주에서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활동중인 공동체를 선정해 공동으로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설명회 및 회의가 없는 시간에도 사회적경제 공동체가

운영하는 각종 공유프로그램으로 주민 간 소통 및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공유경제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공유 공간 운영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간들에도 이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 지난해부터 국비 외역원 등 총사업비 180억원이 투입되는 '전문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다가동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층 공간은 주민설명회와 도시재생회의의 공간 및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대관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센터 2층 공간은 현장활동가들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해 왔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전주형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와 접목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지역주민이 동년 성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발전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총치예방 모범어린이집 현판식

전주시보건소(보건소장 김경숙)가 6일 전주동현어린이집에서 '총치예방 모범 어린이집'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은 울 한해 전주시보건소가 유아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총치예방 교육의 조기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추진한 '총치예방 병아리교실'을 시범운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행복한 놀이터 조성 공간포럼 열린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전주 역사박물관

전북도교육청이 도교육청사 앞 놀이터 조성을 앞두고 모두가 행복한 놀이터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아동의 놀 권리와 놀이 친화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알리고, 도교육청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목적으로 7일 오후 2시 30분 전주 역사박물관 강연장에서 '행복한 놀이터 조성'을 위한 공감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감포럼에는 김명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가 '어린이 놀 권리의 중요성과 교육계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제충만 세이브 더칠드런 권리옹호팀이 '학교놀이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와 정책개선 필요사항'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와함께 김연금 조정사업소 울 대표가 '통합의 가치로 재미있는 놀이터 만들기'라는 주제로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도교육청사 앞 놀이터 조성 현황을 소개한다. /이상민 기자

전북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축제 한마당

오늘 오후 2시 개막식 열려
9일까지 전시 등 행사 다채

이날 축제에서는 전시 분과에 30개 반 230명, 공연 분과 22개반 310명이 참여해 그동안 평생학습을 통해 배운 역량을 선보인다.

윤정수 원장은 "전라북도 평생교육을 주도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 공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개교 70주년을 맞은 대학과 평생교육원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를 갖기 위해 평생학습 축제를 마련했다"며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인 작품전시 및 공연을 통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평생학습 의식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도교육청 명예퇴직 확대 내년부터 연 4회 실시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명예퇴직을 연4회로 확대해 시행한다. 현재는 연2회 실시하고 있다.

6일 도교육청은 공무원의 명예퇴직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전 예측 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명예퇴직을 현행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하반기로 나눠 3월, 6월, 9월, 12월 4차례에 걸쳐 시행한다.

명예퇴직 요건은 재직기간 20년 이상으로 잔여퇴직일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과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선 선정한다. /이상민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이션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서클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린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